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**배포** 2026. 4. 10.(금)

공적입양체계 안착 위한 제도개선 박차

-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(4.9.) -
-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추진상황 점검 및 입양절차 개선대책 논의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4월 9일(목) 17시**에 아동권리보장원(서울시 중구 소재)에서 **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**하였다.

입양정책위원회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제12조에 따라 **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**하는 기구로, 2025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.

이날 회의는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로의 **개편 이후** 시행 중인 입양 절차에 대한 **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**을 **종합적으로 점검·논의**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정부는 최근 입양절차 지연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**3월 19일 예비 양부모의 편의**를 **높이고 입양절차 운영**을 **안정적으로 관리**하기 위해 **'입양 절차 개선방안'**을 **발표**한 바 있고, 이에 대한 **일부 보완이 이루어졌다.**

< 입양절차 개선방안(3월 발표) >

- 입양 신청 방법 개선 : 등기 → 온라인 신청
- 예비양부모 기본교육 한시적 확대 : 월 2회 → 4회, 교육장소 지방으로 확대
- 가정환경조사 인력 확충 : 현 13명 → 단계적 확충
-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 : 월 1회 → 2회
- 결연확인서 전달 시기 조정 : 아동과 첫만남 이후 → 이전 전달
- 법원 단계에서의 입양절차 : 정부와 법원 간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업무협의
- 입양절차 진행상황 안내 : 문의 시 안내 → 온라인에서 상시 확인

이번에는 지난 대책에 더해 **결연방식 관련**하여 **▲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의하고** ▲보호조치 순으로 심의에 상정되던 것을 **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상정**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추가 보완 내용이 담겼다.

정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"행정절차로 인해 **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**, 아동의 빠른 **애착관계 형성**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"라는 의견과 함께 **"아동의 최선의 이익**을 고려하여 **신중한 절차도 중요**하다"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그밖에 ▲상담·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▲법원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 ▲예비양부모 상담·교육 확대 ▲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▲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입양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도 논의되었다.

정은경 장관은 "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**다양한 지적이 제기**되고 있는 점에 대해 **엄중히 인식하고 있다**"라며, "논의결과를 바탕으로 **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**하고, **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**"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입양정책위원회 개요
2. 입양정책위원회 명단
3. 국내 입양 절차 개선방안(요약)

담당 부서 <총괄>	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정책팀	책임자	팀 장 윤장열 (044-202-35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지현 (044-202-3551)
<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>	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	책임자	부 장 황정아 (02-6454-8601)
		담당자	팀 장 정미경 (02-6454-8621)

붙임 1 **입양정책위원회 개요**

□ 위원회 개요

○ **(근거)**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 12조

○ **(기능)**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사항 심의 및 개별 입양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

- 국내입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예비 양부모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
-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결연(아동-양부모 매칭),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(분과위) 등

○ **(지위)** 「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」의 특별위원회

○ **(위원장)** 보건복지부장관

○ **(위원)** 학계전문가, 의료법률전문가, 법원행정처장 추천자, 입양 관련 학식·경험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임명·위촉 (임기 2년)

○ **(구성)**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

- **(정책위원회)** 매 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**(분과위원회)** 개별 입양사례 심의·의결 위해 2개 분과 구성(국내입양, 국제입양), 각 분과위는 10명 이내로 구성(시행령)

*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간주(법 제12조 제6항)

○ **(의결)** 재적 위원의 2/3이상 출석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○ **(지원조직)** 사무국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설치·운영

붙임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

연번	분야	성명	소속·직함
1	위원장	정은경	보건복지부 장관
2	학계	김형모	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3		노충래	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4		박현선	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
5		조소연	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
6	의료	전지현	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
7	법률	최인해	법무법인 숭인 변호사
8	법원행정처 추천	박근정	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
9	정책·실무, 학식 및 경험	김성미	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
10		오창화	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
11		전세희	뿌리의 집 입양인권리옹호팀 팀장
12		홍경민	한국입양홍보회 회장
13		정익중	아동권리보장원 원장
14		이주연	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
15		정필현	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

* 법적 요건순서, 성명 가나다순으로 작성

붙임 3 국내 입양 절차 개선방안(요약)

□ 현황

○ 제도 개편에 따른 **초기 예비양부모 신청**이 **집중**된 가운데, **순차적 절차 운영**과 **교육·조사 수행여건 제약**으로 일부 속도가 더딘 상황

□ 개선방안 주요내용

▸ 현 시점에서의 **주요 병목발생 요인**(예비양부모 교육, 가정조사) 해소
▸ 각 입양절차를 점검하여 **필수 절차는 충실히**, 행정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

① **(신청방법) 현재 등기우편 방식**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**입양신청 절차**를 **온라인 신청 방식**으로 **개선**,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 제고

② **(교육확대) 입양 기본교육**을 **매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, 비수도권**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**교육 기회 확대**('26.4월)

③ **(조사인력 확충) 위탁기관 가정환경조사 인력의 단기인력 충원 등**을 통해 **일시적 대기 상황** 해소(재정당국과 협의 중, '26.3월~)

④ **(분과위 운영)** 예비양부모 자격·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**월 1회 → 2회 확대**하고, **가정위탁아동**과 **위탁부모** 결연 **우선심의**, **결연 상정방식*** 개선

* (기존) 보호조치 순 상정 → (개선) 시설 아동 등 아동의 상황 우선 고려 상정

⑤ **(결연확인서)** 법원에 제출할 기본서류인 양측 결연 수용의사 확인자료를 예비양부모 **희망시 아동과 첫만남 이전 전달**('26.4월)

⑥ **(법원단계 입양절차) 법원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**를 **구축**하여 **입양절차 운영 과정**에서 발생하는 **현안 공유** 및 **개선사항 지속 논의**

⑦ **(진행상황 안내) 입양 절차 진행 상황**을 **온라인**으로 **확인**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→ **입양처리 단계의 투명성 강화**(4월 말 오픈예정)

⑧ **(인력 확충)** 입양절차 개선에 대응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인력 **추가 확충 추진**